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2023 정부 업무보고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3. 1. 26.(목)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단	책임자	단 장 김승호 (02-2110-3475)
		담당자	검 사 이수창 (02-2110-3474)
		대변인실	02) 2110-3033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 -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

□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023. 1. 26.(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
-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②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
-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

③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 근절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구축

④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 국가 기본법인 「민법」, 「상법」 개정
-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
- 최신 IT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⑤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 사회적약자 보호·지원 강화
- 외국인 인권수준 제고
-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
-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의 출소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23. 상).

*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 :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

○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냈고, 국민들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 앞으로도 고위험 성범죄자는 계속 출소할 것이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반복된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 이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500미터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하여 ▲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하고, ▲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

○ 대마 합법화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마약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비대면 거래도 용이해지고 있다.

- 이에 따라 10대 마약사범이 10년 동안 11배 증가하는 등 10~20대 마약사범이 대폭 증가하고, 공무원, 교원,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공적·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직종에까지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마약과는 전쟁하듯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표명하고, 마약 제조·유통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해지면서, 대규모 필로폰·마약류 밀수조직이나 부유층 등의 마약 거래를 적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법무부는 「단속-치료-재활-예방」을 연계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23.1분기),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23.상)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약유통범죄를 근절한다.
 - 공무원·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 마약사범에 대해 초범이라도 구공판을 적극 검토하고, 유관부처와 징계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 동시에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국민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한다.

- 주가조작, 무자본 M&A, 불법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하며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일삼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한다.
 - 전국 18개 지검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DB를 공유해('23. 상) 조직폭력범죄를 근절한다.
-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22. 11. 및 '23. 1. 입법예고).
 - 아울러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추진('23. 상)한다.
- 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로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한다.

*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 출범('22. 7.) 및 집중 단속으로, 전년 대비 피해 30% 감소

②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

-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200만 명을 넘어 2030년에는 3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반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0.81명)과 빠른 고령화로 생산연령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그럼에도 우리의 외국인 정책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정책·예산 집행의 중복과 비효율성도 드러나고 있다.
- 국민들은 미래 대한민국의 인구구성, 사회통합 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으나, 어디에서 책임 있는 대답을 찾아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기 어렵다.
- 이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여(‘23.상), 당면한 문제에 책임있게 답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비효율 외국인 정책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의 기반을 구축한다.

□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을 추진한다.

- 숙련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고용허가제) 보완(‘23. 신규 11만 명 도입), 안정적 숙련인력 공급을 위해 해외기술·국내유학·숙련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 신설(‘23. 상),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행(‘23. 하)을 통해, 외국 숙련인력을 유연하게 도입한다.
-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산업 종사자 대상 네거티브 방식 비자,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통해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한다(‘23. 상).

-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해('23. 상)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선 분야 별도 쿼터를 신설(400명)하는 등 조선업계의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한다.

* ▲ 발급수수료 인하(1만원 ⇨ 5천원) ▲ 유효기간 연장(2년 ⇨ 3년) ▲ 지원 언어 확대(2개 ⇨ 7개) ▲ 단체신청 가능인원 증원(30명 ⇨ 50명) 등 사용자 편의 제고('23. 상) ▲ 입력항목 간소화

□ 이와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추진한다.

-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을 추진하여 2023년 41만 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인 20만 명대로 감축한다.
- 영주제도 및 이와 연계된 외국인 투표권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분은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 하고('23.), 세금 납부, 일정기간 국내 실거주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실질적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23. 하).

③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를 근절한다.

- 국가경제와 국민불편을 불모로 한 불법집단행위, 영장집행 물리력 저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불법과의 타협을 용납하지 않고 반법치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23. 상)하여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불법과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금품갈취·공사방해 등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조폭식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 수사·재판 중 국외로 도피하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국외도피사범을 반드시 검거·송환**하고, 재판시효 정지 제도를 도입해('23. 상 「형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한다.

- 정치적 선동, 사익 추구를 노린 조직적·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에 적극 대처한다.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

-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23. 상)하는 등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한다.
-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 운영('23. 상), 자금세탁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도입('23. 상)을 통해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하여 과학수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4 미래변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 현행 「민법」은 제정 이후 65년간 유지되어 현재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구거(溝渠, 민법 제229조)', '몽리자(蒙利者, 민법 제233조)', '승역지(承役地, 민법 제293조)'와 같은 일본식 표기 한자를 비롯해 '임의후견임감독인(민법 제959조의15)'과 같은 오타자, 시대변화를 담지 못한 1958년 제정 당시의 법제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 우리 민법의 모태가 된 대륙법계 국가 대부분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민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왔으나, 우리는 오랜 기간 장기 과제로 추진했을 뿐 전면 개정에 이르지 못했다.
 - 이에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3차 민법 개정위원회를 올해 출범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시대 변화에 맞게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23. 상).

- 자유시장경제 법질서 인프라의 핵심인 「상법」을 개정하여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스타트업 등 소규모회사 규제 완화', '기업구조변경 시 주주 보호 강화', '현물·주식 배당 활성화' 등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23.).

□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한다.

- 론스타사건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정부 상대 ISDS 소송 청구 금액은 총 7조 4,973억 원(7건)에 이르는 등 당면한 국제투자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사전 예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 국제법무업무를 총괄하는 '국제법무국(가칭)'을 신설하여, 국제투자 분쟁, 국가간 공법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23. 상).
 - 항공·우주 등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국제규범의 성안과 도입을 선도하고('23. 상), '28년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총회 (ICCA Congress) 및 상설중재재판소(PCA) 지역사무소를 유치하는 등 서울을 국제중재 산업의 허브로 조성('23. 상)한다.

□ 최신 IT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시스템상 신청만으로 기관 보관 전자문서가 법원에 제출되도록 「민소전자문서법」을 개정한다('23. 상).
-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CBT 변호사시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23. 8. 개발), '24. 1.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최초 시행한다.

⑤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 범죄피해자에게 신변보호, 심리상담, 경제·법률적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연계하는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23. 6.).

- 검찰 '공익대표전담팀' 확대('23. 하.),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및 피해자 지원 전담부서 증설('23. 하), 아동학대 가해자 감호위탁 활성화('23. 상)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 난민 전문통역인을 확대하고(160명 ⇨ 308명, 34개 언어), 난민심사 인프라를 보강해('23. 하) 국익과 인도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난민 정책을 추진한다.
- 공항 밖 출국대기소를 신설하고('23. 하), 개방형 보호시설을 확대('23. 9.)하는 등 외국인 보호시설도 개선한다.
- 수용시설 과밀화·노후화를 해소하고,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23. 상)를 통해 수용시설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23. 하), 소년원생 급식비를 인상(1일 6,554원 ⇨ 8,139원, '23. 1. 필요예산 6억 5,700만원 확보)하는 등 수용시설 내 인권을 철저히 보호한다.
-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3.~'27.) 수립, ▲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 '23. 1.) ▲ 자유권규약 심의('23. 10.~11.) ▲ 사회권규약 국가 보고 절차('23. 10.~11.) 적극 대응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을 추진한다.

별첨

별첨1 [인포그래픽] 2022년 법무정책 정책성과

별첨2 [인포그래픽]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별첨3 법무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별첨1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2022년 법무부 정책 성과

정의와 상식의 법치



1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마련 사후적 치료감호 도입 배달대행업 등 취업제한	2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형사미성년자 연령 합리화 (14세▶13세) 수도권에 학교교육 중심 '소년 교정시설' 운영	3 스톱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톱킹 처벌 스톱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4 부패·경제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금융·증권, 국가재정 합수단 출범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이후 피해 30% ↓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참여	5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 개선 「형사소송법」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 「수사개시규정」 개정 검찰청 직제 정비,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6 상식·공정 관점에서 국민 억울함 해소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확대 국가배상 사건 상소 포기 (故 장준하 유족 사건 등) '자연이자 면제' 화해권고 수용(인혁당 사건)
7 만 나이 통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나이 표시를 '만 나이'로 통일 성년이 된 이후 한정승인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8 론스타 등 ISDS 사건 철저 대응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 판정문 정정신청, 취소신청 준비	
9 경제를 살리는 비자제도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원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10 현장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급식비, 특수건강검진비 인상 완전 4부제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



1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불안 해소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적용 대상

- 전자장치 부착자 + 재범
- 2회 이상 성범죄 + 습벽
-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

기존 전자장치 부착자도 적용

범원 결정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500m 이내 거주제한

- 거주장소 지정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마약범죄 집중 단속



-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 온라인 마약유통범죄 근절
- 자동검색 프로그램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



- 검찰 단계별 치료 재활
-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
- 전문병원 연계

마약 예방교육 강화



- 학생 청소년 대상 교육
- 온·오프라인 홍보 활성화
- 교육체계 마련

조직폭력범죄 및 민생침해사범 적극대처

조직폭력범죄 근절



- 추가조직, 무자본 M&A, 불법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하는 조폭 척결
- 검·경 수사협업체 구축 및 폭력조직
정보·DB 공유

민생침해사범 등 엄정대응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2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정책 추진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법무부·과기부·행안부·고용부·
외교부·교육부·여가부
부처별 정책 중복·분산



- 통일되고 신속한 정책방향 설정
- 중복·비효율 및 예산낭비 방지
-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기반 구축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



외국 숙련인력의
유연한 도입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보다 편리한
전자여행허가(K-ETA)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불법체류 외국인 절반 감축
(2023년 41만명 → 2027년 20만명대)

외국인 영주제도 개선



-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
- 세금납부, 국내 실거주 등 심사

데이터 기반 정책 시행



3 반범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국민 상식에 반하는 반범치행위 근절			수준 높은 형사사법체계 구축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 법집행 방해 및 회피 사범 적극 대처	 해외도피사범 엄단 • 국외도피 중범죄자 적극 송환 • 국외도피시 재판시효 정지제도 도입	 인격 파괴 명예훼손·모욕범죄 대응 강화	 형사사법체계 정비	 검찰 수사시스템 개편
	 인간존엄 훼손 신종 온라인 협박 엄단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4 미래변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국가 기본법인 「민법」, 「상법」 개정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	최신 IT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65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 1958 → 2023 민법 개정 - 제3차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 시대변화에 맞는 개정으로 경제성장 뒷받침	국제법무업무 부서 통합·확대 국제규범 도입 해외진출 기업지원 국제분쟁 대응 국제중재 활성화 ‘국제법무국(가칭)’ 신설 국제사회에서 국제법무업무 선도 국제법률분쟁 대응 시스템 체계화 서울을 국제중재 산업 허브로 조성	최신 IT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소송 과정의 행정서류 제출 간이화 국민편의를 위한 법무서비스 혁신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 CBT 변호사시험 -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기업환경 개선 및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 - 스타트업 설립·운영 규제 완화 - 물적분할시 주주보호 강화 - 현물·주식 배당 활성화 상법 개정		

5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사회적약자, 외국인 보호·지원	수용시설 인권 개선·인권정책 강화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 아동학대 가해자 감호위탁 활성화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 개방형 보호시설 확대 ‘공항 밖 출국대기소’ 신설 -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수용시설 인권 강화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신설 - 수용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 - 소년원생 급식비 인상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 국제사회와 공감하는 인권정책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미래변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 -

2023. 1. 26.



법무부

순서

2022년 법무정책 추진성과

□ 추진성과	14
--------------	----

2023년 5대 핵심 추진 과제

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17
②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20
③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22
④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24
⑤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26

추진성과

□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법제 마련

○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근절

- ▲ 고위험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제한('22. 10.)
- ▲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처벌 확대,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등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마련('22. 10.)

○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합리화(14세 ⇨ 13세) ▲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에 보호관찰 병과 ▲ 소년법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 제도 도입 ▲ 외출 제한명령 대상자 감독방식을 스마트워치 방식으로 개선('22. 10.)

□ 부패·경제범죄 등 중요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시스템 복원

○ 금융·증권, 국가재정, 공정거래 등 중요 경제범죄 엄단

- ▲ 금융·증권범죄 합수단('22. 5.), 국가재정범죄 합수단('22. 9.) 출범을 통한 관련범죄 적극 수사 ▲ 공정거래법위반 사범 엄정 대응

※ '22. 5.~12. 자본시장 교란 사범 267명 기소(36명 구속), 공정거래법위반 사범 168명 기소(3명 구속), '22. 9.~'23. 1. 국가재정범죄 사범 36명 인지(5명 구속)

○ 마약범죄 및 민생침해사범 집중 단속

- ▲ 마약 제조·유통 등을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22. 9.) ▲ 보이스 피싱범죄 합수단 출범('22. 7.) 및 집중 단속(전년 대비 피해 30% 감소)
- ▲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참여('22. 8.) ▲ 전세사기 철저 수사('22. 7.)

구분	수 사 성 과
마약(검찰)	'22. 5.~12. 549명 입건(142명 구속) / '22. 5.~11. 마약류 188.8kg 압수
보이스피싱(합수단)	'22. 7.~12. 111명 입건, 국내 총책·조직폭력배 등 24명 구속
불법사금융(검·경)	'22. 9.~12. 283명 기소(18명 구속) / 검찰 직접수사 62명(검찰 인지 17명)
전세사기(검·경)	'22. 7.~12. 145명 기소(46명 구속)

○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범죄대응능력 강화

- ▲ 「수사개시규정」 개정하여 검찰 직접수사 대상인 부패·경제범죄 범위 명확화('22. 9.) ▲ 검찰 수사의 효율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제도 폐지('22. 6.) 및 검찰청 직제를 정비하여 '형사末부만 수사 허용', '수사팀 설치 시 법무부장관 승인' 제도 등 폐지('22. 7.)

□ 수용시설 인권보호 강화

○ 교정시설 인권보호 철저

- ▲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한 수용공간 확충 및 시설 현대화*
▲ 급식비, 특수건강검진비 인상 등 현장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 ① 원주교도소 신축부지 착공('22. 6.), ② 여주교도소 등 7개 기관 증·개축('22. 12.), ③ 안양시와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사업 등 관련 업무협약 체결('22. 8.)

○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 ▲ 창살 제거 등 인권친화적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 운영('22. 4.)
▲ 보호장비 종류, 사용요건 명확화 등 「외국인보호규칙」 개정('22. 12.) ▲ 공항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전환('22. 8.)

□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법무행정

○ 오래도록 고통 받은 국민의 억울함 해소

-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 국가배상 사건 상소 포기('22. 11. 故 장준하 유족 사건, '22. 12. 화성연쇄살인 사건, '22. 10. 낙동강변 살인 사건) ▲ 인혁당 사건 관련 '지연이자 면제' 화해권고 수용('22. 8.) ▲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확대('22. 8.)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행정 실시

- ▲ '만 나이' 통일('22. 12.),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22. 11.) 등 「민법」 정비 ▲ 론스타 사건 등 국제투자분쟁 사건 철저 대응을 통한 국익보호* ▲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한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철저('22. 6.)

* 론스타 사건 관련,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22. 8.) 및 판정문 정정신청('22. 10.)

○ 경제를 살리는 비자제도 개선

- ▲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원('22. 9.) ▲ 첨단분야 인턴 비자('22. 8.), 인구 감소 지역 정착을 장려하는 지역특화형 비자('22. 10.) 신설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시범실시 및 이공계 특성화 기관 핫라인 구축('22. 12.)

2023년 핵심 추진과제

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

○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 학교,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부터 500미터* 이내 거주제한 ▲ 주간 등 특정시간대 이외 외출 제한 ▲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신설('23. 상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 등을 고려하여 거주지 제한거리를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법원이 개별 특성에 따라 결정

○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 고위험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 사후적 치료감호 도입*('23. 중 국회 통과) ▲ 다른 범죄로 재수감된 성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등록기간 연장('22. 11. 입법예고) ▲ 전자장치 훼손하고 도주한 피부착자 신상공개**('23. 상) ▲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시범실시('23. 하)

* 국립법무병원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320개 병상 규모) 신축 예정('23. 10.)

** 재범 방지 및 신속 검거를 위해 혐의사실 개요, 피부착자의 얼굴 및 신체의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은신 예상지역 등 공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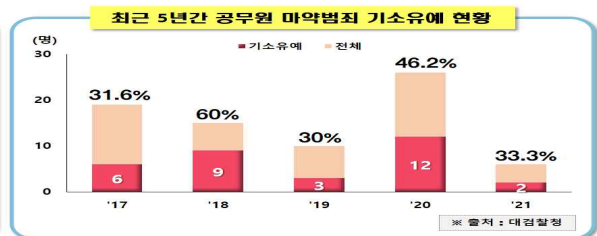
※ 가석방 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제한된 주거지 등에서 사회적응력 배양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심리상담과 직업훈련 실시

□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부처·기관간 협력강화를 통해 마약범죄 집중 단속

- ▲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 출범('23.1분기)
- ▲ '마약수사 실무협의체(검·경·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23. 상)
- ▲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 활용한 온라인 마약유통범죄 근절('23. 상)
- ▲ 공무원, 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 마약사범 엄정처벌*('23. 상)

*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기존에는 기소유예 처분 비율이 높았으나, 향후 초범이라도 구공판 적극 검토하고, 유관부처와 함께 징계강화 방안도 논의



○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

- ▲ 검찰 단계별 치료·재활 기회 제공*('23. 상) ▲ 교정시설 내 마약 중독자 심리치료 전문인력 양성('23. 상) ▲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전문병원 연계 등 치료 강화 ▲ 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마약중독자 통합정보 관리, 전문강사풀 구성 등 협력 강화('23. 상)

* **구속 기소** 치료감호 병행 **불구속 기소** 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중독치료 받는 경우 양형에 반영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조건부(마약퇴치운동본부, 4일) ⇨ 선도조건부(보호관찰소, 6개월) ⇨ 치료조건부(전문병원, 기본 2개월 입원 등)

○ 마약 예방교육 강화

- ▲ 학생·청소년 대상 법교육에 '마약예방' 추가('23. 4.) ▲ 유튜브를 활용한 마약예방 콘텐츠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 활성화('23. 6.)
- ▲ 비행단계별 재범방지 교육체계 마련*('23. 6.) ▲ 마약 예방교육 확대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23. 4.)

* (초기) 예방교육 및 상담 ⇨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강화, 특별준수사항 부과
⇨ (시설수용자) 약물중독예방 교육 및 대전소년원 등 치료·재활 전담기관 연계

** 마약 예방교육 대상을 중고생(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여가부)으로 확대, 식약처·마약퇴치운동본부('21. 4. 업무협약 체결) 등과 협업하여 재범방지 교육·상담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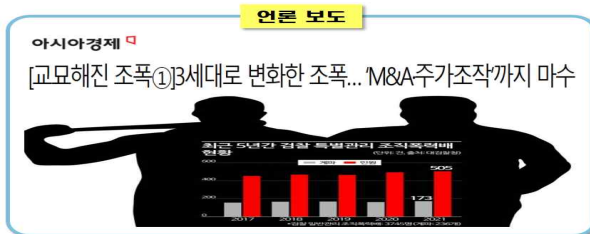
10~20대 중독 마약 확산 사례

- ▶ 고등학생 등 50여 명이 인터넷으로 펜타닐 구입·투약·판매 등으로 검거('21. 5. 대검찰청)
- ▶ 「좀비처럼 기어 다녀...10~20대 마약 펜타닐 처방 급증한 이유」 처방 받기 쉽고, 가격 저렴, 투약 간편('22. 9. 언론보도)

□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 사회의 암적 존재인 조직폭력범죄 근절

- ▲ 주가조작, 무자본 M&A, 불법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하는 조직폭력배 척결('23. 상) ▲ 전국 18개 지점에 검·경 수사협의회체 구축 및 폭력조직 관련 정보·DB 공유('23. 상)



○ 전세사기 엄단 및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 ▲ 조직적 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 집중 단속*('23. 상) ▲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통해 법률지원 및 제도개선('23. 상) ▲ 선순위 임차인 및 체납 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 등기 간이화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22. 11. 및 '23. 1. 입법예고)

* '검·경·국토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개최, '7대 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 구축,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지속 시행

** 법무부(법률구조공단, 법률홍닥터, 마을변호사),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민간전문가 등 참여('22. 12. 출범)

○ 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 엄정 대응

- ▲ 국제형사공조*를 통해 국외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주범 적극 송환('23. 상) ▲ 스토킹범죄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23. 상), 사건처리기준 강화, 스토킹에 악용되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 엄단('23. 하) ▲ '제2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적극 대처('23. 상)

* 태국 등 아세안 지역 신생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인 「SEAJust」 가입 예정('23. 상)

②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 부처별로 시행되는 개별 정책으로 인한 중복·비효율 및 예산 낭비 방지, 범정부 차원의 통일되고 신속한 출입국·이민정책 결정 등을 위하여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23. 상)

※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22. 11.)'을 설치하여 국민들 의견 수렴 중

○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기반 구축

- ▲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정책을 국익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평가하는 등 정책 정합성 제고('23. 하) ▲ 국내 체류 재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비자 정책* 추진('23. 상)

* ① 음식업, 숙박업 등 재외동포 취업제한 완화, ② 학력·한국어능력 등을 갖춘 청년동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동포에게 각각 영주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청년동포 비자 트랙', '동포 간병인력 비자 트랙' 신설

□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

○ 외국 숙련인력의 유연한 도입

- ▲ 숙련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고용허가제) 보완*
▲ 안정적 숙련인력 공급을 위해 해외기술·국내유학·숙련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 신설('23. 상) ▲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23. 하)

* '23년 신규 11만명 도입, 10년 연속 취업에 따른 체류관리·사회통합 정책 병행

○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 ▲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종사자 네거티브 방식 비자 활성화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전면 시행 ▲ 창업 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 활성화로 기술창업 인재유치('23. 상)

* 법무부·중기부가 공동지정한 글로벌 창업이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 창업교육과정

○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 ▲ 조선업 비자 심사지원인력 증원(20명) ▲ 조선 분야 유학생 실무 능력검증 면제 ▲ 숙련기능 쿼터 확대(2,000명 ⇨ 5,000명) 및 조선 분야 별도 쿼터 신설(400명)

○ 보다 편리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 ▲ 발급수수료 인하(1만원 ⇨ 5천원) ▲ 유효기간 연장(2년 ⇨ 3년) ▲ 지원 언어 확대(2개 ⇨ 7개) ▲ 단체신청 가능인원 증원(30명 ⇨ 50명) 등 사용자 편의 제고('23. 상) ▲ 입력항목 간소화

※ 관광 활성화를 위한 'K-컬처 비자', '디지털 노마드 비자(일과 관광 병행)' 신설('23. 하)

□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

○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 ▲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추진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 수준('23. 41만명 ⇨ '27. 20만명대)으로 감축 ▲ 경찰과의 협업 등 상시단속 및 입국규제 면제 등을 통한 자진출국 유도 ▲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23. 상)

○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 영주제도 전면 재검토

- ▲ 영주제도 및 연계된 외국인 투표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분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23.) ▲ 세금 납부, 국내 실거주 등 외국인 영주권자 실질적 심사 제도 도입*('23. 하)

* 외국인 영주권자는 강제추방이 제한되고, 국민과 유사한 수준의 권리와 복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자격 취득 이후의 관리 절차는 부재

○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시행

- ▲ 국제기준에 맞게 외국인 인적정보 표준화('23. 12.)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마련('23. 8.) ▲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등 관광·소비 분야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23. 12.) ▲ 빅데이터 (관광객, 유학생, 계절근로자 등) 활용하여 타부처·민간 정책지원('23. 하)

* 외국인으로 신분증 진위확인으로 인터넷 은행 계좌개설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③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 근절

○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

- ▲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불모로 한 불법집단행동은 ‘불법과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 ▲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 강화(‘23. 상) ▲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금품 갈취·공사방해 등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조폭식 불법행위 근절

* 고용부·행안부·국토부 등과 협조하여 행정제재 등 선제적 대응을 요청하는 업무 프로세스 마련 등 제도개선 병행



○ 법집행 방해 및 회피 사범 엄단

- ▲ 불법적 수단의 법집행 방해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대응 ▲ 서울중앙 등 7개 검찰청에 고액벌과금 집행팀 신설(‘23. 하) ▲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및 재판시효 정지 제도 도입(‘23. 상 「형소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형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신설(‘23. 중 국회 통과)

○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명예훼손·모욕범죄 대응 강화

- ▲ 정치적 선동, 사익 추구를 노린 조직적·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 엄벌 ▲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방지를 위한 게시물 삭제요청 절차, 방통위의 피해자 구제절차 등 적극 홍보 및 지원(‘23. 하)

○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신종 온라인 협박범죄 적극 대처

- ▲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다양한 방식의 협박범죄 강력 대응 ▲ 신변보호·접근 금지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적극 검토(‘23. 하)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구축

○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 ▲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 문제점 해결을 위한 수사준칙 개정('23. 상) ▲ 신속한 형사절차 진행 및 인권보호를 위해 검사 피신조서 대체 증거방법 마련('23. 하 「형소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부패·경제범죄 척결을 위한 검찰 수사시스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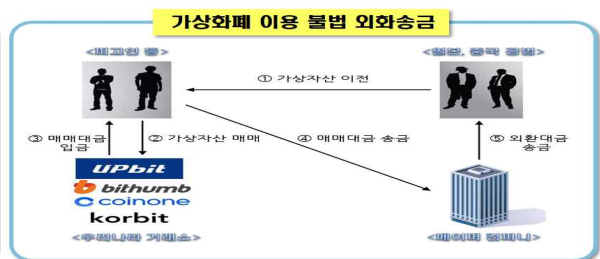
- ▲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 개편 등 범죄정보 수집역량 강화('23. 상) ▲ 공정거래, 범죄수익환수 등 전문부서 증설 추진('23. 하) ▲ 공정거래사범협의회 정례화 등 공정위와 협력 강화('23. 상)

○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하여 과학수사 인프라 정비

- ▲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 운영('23. 상) ▲ 음성인식조서, 원격화상조사 등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마련('23.~'24.) ▲ 가상화폐 이용한 자금세탁 추적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도입('23. 상) 및 독자적 추적·분석 시스템 개발('23. 하)

* 검찰의 과학수사·포렌식 노하우를 다른 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찰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D-Net)을 모델로 한 클라우드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부, 식약처, 금감원 등 특사경 및 해경, 군검찰 등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예정

** 거래내역 모니터링, 거래간 연관관계 정보 추출, 송금 전후 자금 출처 확인 가능



○ 사이버범죄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 ▲ 데이터 보전명령 등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회원국들간 신속·효율적인 형사사법공조를 도모하는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추진('23. 하) ▲ 「UN 사이버범죄 협약」 성안 적극 참여('23. 하)

4 미래변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 국가 기본법인 「민법」, 「상법」 개정

○ 65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 ▲ 제정 이후 약 65년간 유지되어 현재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민법」을 국격에 맞게 개정하여 국가의 역동적 경제성장을 뒷받침(‘23. 하) ▲ 제3차 ‘민법 개정위원회’ 출범하여 개정필요 분야 발굴 및 집중 연구·검토(‘23. 상)

구분	개정필요 분야
일본식 표기, 한자, 오탈자	▶ 一町步(\$1008의3), 蒙利者(\$233), 溝渠(\$229①), 承役地(\$293②) ▶ 임의후견임감독인(\$959의15④) ⇨ 임의후견감독인
60년 전 법제 유지	▶ 현대사회의 빠른 거래주기를 고려한 채권 소멸시효 합리적 조정(10년 ⇨ 5년 이하) ▶ 물권임에도 등기에 공시되지 않아 분쟁을 야기하는 부동산 유치권 폐지
시대변화 미반영	▶ IT 기술 발전에 따른 거래관계를 민법에서 규율(디지털콘텐츠, AI 등) ▶ 초상·성명 등 인격적 가치 보호를 위한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명문화

※ 제1차(‘99.~’03.), 제2차(‘09.~’13.) 민법개정위원회를 통해 ‘04년(근저당, 보증 등) 및 ‘14년(인격권, 소멸시효 등) 2차례 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 회기 종료로 폐기

○ 기업환경 개선 및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 ▲ ‘전자 주주총회 제도(통지, 투표, 회의 전반 전자화)’ 도입(‘23. 상)
- ▲ 기업 구조변경 시 주주보호 강화(주식매수청구권 인정 등, ‘23. 상)
- ▲ 스타트업 창업·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소규모회사 규제 완화*(‘23. 하)
- ▲ 현물·주식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 절차 및 방식 정비**(‘23. 하)

* 현재 가장 3년인 이사 임기제한 완화,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 경미한 등기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규정 정비 등 소규모회사 운영의 탄력성·유연성 제고

** ‘선 배당결의 / 후 배당기준일’ 방식도 허용(‘22. 11. 유권해석)하여 실제 배당액을 확인하고 투자 결정 가능

※ ‘22. 12. 교수, 판사,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상법특별위원회’ 출범

□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

○ 국제법무업무 관련 부서 통합·확대

-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국제법무업무 부서 통합 기조에 발맞춰
① 국제규범 성안·도입, ② 해외진출 기업 지원, ③ 국제분쟁 대응, ④ 국제중재 활성화 등을 총괄하는 ‘국제법무국(가칭)’ 신설(‘23. 상)

○ 국제사회에서 국제법무업무 선도

- ▲ 핵에너지·항공·우주 등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규범*의 성안과 도입 선도('23. 상) ▲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강화(해외법제 검토, 기업 디렉토리 구축, 계약서 작성 등, '23. 상)

* AI 이용 계약, 데이터거래 규범(UNCITRAL), 블록체인, 우주항공자산 관련 금융 지침(UNIDROIT),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규칙(HCCH)

○ 국제법률분쟁 대응 시스템 체계화

- ▲ 국제투자분쟁 대응 및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역량 강화*('23. 상)
▲ 국가간 공법분쟁(영토, 환경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23. 상)
▲ '28년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총회(ICC Congress), 상설중재재판소(PCA) 지역사무소 유치 등 서울을 국제중재 산업 허브로 조성('23. 상)

* 현재 우리 정부를 상대로 총 7건의 ISDS 진행 중(청구금액 총 7조 4,973억원)

□ 최신 IT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 소송 과정의 행정서류 제출 간이화(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 ▲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시스템상 신청만으로 기관보관 전자문서가 법원에 제출되도록 「민소전자문서법」 개정('23. 상) ▲ 신속한 절차진행 및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회생절차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23. 하)



○ 국민편익을 위한 법무서비스 혁신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23. 8. 3단계 사업 추진) ▲ CBT 변호사시험 프로그램 개발('23. 8.) 및 첫 시행('24. 1.) ▲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추진('23. 상)

※ 종이 없는 형사재판을 위한 「형사절차전자문서법」 '24. 10. 시행 예정

5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 사회적약자 보호·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개선

- ▲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23. 6.) ▲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개발('23. 하) ▲ 국선전담변호사가 피해자 지원에 전념하도록 예산 확보·증원 등 제도 강화('23. 하) ▲ 피해자가 인적 사항 노출 없이 공탁금 수령 가능한 '형사공탁 특례' 철저 시행('23. 상)

○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확대

- ▲ 친권상실, 성년후견, 유령법인해산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검찰 '공익대표전담팀(서울남부·대구·부산지검 설치·운영 중)' 확대('23. 하)
▲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및 피해자지원 전담부서 증설 추진('23. 하)
▲ 아동학대 가해자 감호위탁 활성화('23. 상)



□ 외국인 인권수준 제고

○ 국익과 인도주의가 조화되는 난민정책

- ▲ 난민위원회 심의위원 증원(15명 ⇨ 50명) ▲ 난민 전문통역인 확대 (160명 ⇨ 308명, 34개 언어) ▲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팀 신설 등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23. 하)

○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 ▲ 소송제기 등으로 공항 내 장기 대기하는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 향상을 위해 '공항 밖 출국대기소' 신설 추진('23. 하) ▲ 생활 공간 확충, 운동장 상시개방 등 개방형 보호시설 확대('23. 9.)

※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이어 청주외국인보호소를 개방형으로 전환 추진

□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

○ 수용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 ▲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 현장의 인권 강화를 위해 교정시설 신축·이전, 유휴부지 활용한 수용동 증·개축 등 추진* ▲ 소년분류심사원 명칭 변경(소년보호심사원) 및 시설 확충(1개 ⇨ 3개)

* ① 거창구치소 신축('23. 1.) ② 신축 대구교도소 보강공사 완료('23. 9.) 후 이전 예정 ③ 천안 등 7개 교도소 및 서울 등 2개 구치소 수용동 증축

※ 53개 교정기관 중 준공된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 27개(51%)

○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 ▲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 운영('23. 상) ▲ ① 정신질환·발달장애 수용자 치료체계 개선, ② 수용시설 의료인력 확충, ③ 적절한 치료감호 제도 운영, ④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논의('23. 하)

※ 법무부 내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신설('22. 12.)

○ 소년수용자 처우개선 및 학과교육 강화

- ▲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 철저 분리('23. 1.) ▲ 소년원생 1인당 급식비를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인상(1일 6,554원 ⇨ 8,139원, '23. 1. 필요예산 6억 5,700만원 확보) ▲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 전담 교정시설' 운영('23. 상) ▲ 소년교도소 교정·교육 강화*('23. 상)

* 검정고시 과정 필수화, 대학진학 준비·방송통신대학 과정 신설 등

□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3.~'27.) 수립

- 국제사회의 권고, 국정과제, 새로운 인권수요 등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 제시

○ 국제사회와 공감하는 인권정책

- ▲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23. 1.) ▲ 자유권규약 심의('23. 10.~11.) ▲ 사회권규약 국가보고 절차('23. 10.~11.) 적극 대응